

도 경제 활력 예산 10% 증액 '눈 가리고 아웅'

"나이 들어 아이 돌보면 안되나?"

제주시 가족센터 '70세 이상' 돌보미 퇴직제 추진 이용 부모 "나이보다 아이들 정서적 교감이 중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양 행정시 2025년 예산안 심사 경제 소관 부서 삭감액 103억... '행정시 확대론' 지적 '경제 예산 도민 체감은 도가 아니라 행정시서 나온다'

제주도 분청 예산은 증가하는데 비해 양 행정시에 있는 같은 부서의 예산은 감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0일 양 행정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견입동)은 "도민들의 경제 관련 예산 체감도는 도청이 아니라 행정시에서 나온다"며 "제주도가 시장 연설에서 경제 활력 예산을 10.1% 증액(132억)했다가 홍보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하는 양 행정시 경제 소관 부서 삭감액은 103억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사실상 29억 증액한 거나 다름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

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행정시에서 "일몰 사업 영향 등으로 내년 예산이 줄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신규 사업 편성 등 적극적으로 나아가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해마다 양 행정시 예산이 미흡하고 확대받는 게 지적되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제주도청과 비교한 금액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제주도 예산안 중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03% 증액됐고 경제협력국은 10.09% 늘었다. 제주시는 분청 기준 전년 대비 4.55% 감소, 서귀포시는 0.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양 행정시 부서별 세출 예산은 제주시



양영식 위원장, 한권 의원, 현기종 의원, 양홍식 의원

3.9%, 서귀포시 6.8%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는 경제소산과가 92억이 넘는 45.1%, 서귀포시는 해양수산과가 98억 이상인 16.9% 각각 삭감됐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도민 사회의 화두가 민생 경제인데 지금의 예산 편성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행정시의) 예산 실링(예산 지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적절하게 이뤄질 때 민생 경제 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타 실·과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크다"면서 "수산 분야를 확대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해양수산과를 해체하는 게 낫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 같은 감액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의원들은 보험료 할증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 턱없이 부족한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액 등을 짚으며 농·어업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식품위생업소 180개소 행정 처분 경감

제주시, 과태료 감경 등 적용 정부 특별 감면 한시적 조치

제주시는 정부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감면 조치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180개소의 행정 제재 처분이 경감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7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는 1/2로 줄여주고 시정 명령은 행정 지도 조치로 낮추는 등 행정 제재 처분이 경감된다.

제주시 관내에서는 11월 15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95개소, 휴게음식점 34개소, 단란주점 21개소, 유흥주점 20개소, 제과점 8개소, 유통전문판매업 3개소, 식품제조가공업

2개소 등이 감면 대상에 들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존 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108건 ▷영업장 임의 확장 24개소 ▷신규 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19건 ▷가격표 미게시 15개소 ▷간판에 업종 미표시 14개소 순이다.

이들 업소는 행정 제재 처분 경감 한시적 조치에 따라 1회에 한해 과태료 감경과 행정 지도가 실시됐다.

제주시는 "해당 업소의 위반 행위가 해소 또는 시정됐는지 재점검해 행정 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재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영업 정지 등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가을비 속 대파 수확 20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가을비 속에서 대파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시 가족센터가 고연령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년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시끄럽다.

제주시 가족센터는 최근 고연령 아이돌보미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돌봄을 신청하는 부모들의 요청 등을 고려해 70세 이상 돌보미에 대해 정년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부모들이 40~50대 돌보미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연령이라도 아이와 지내며 친근해지고 돌봄을 지원하는데 체력적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정년퇴직제를 도입해 돌봄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다.

지난해부터 아이돌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한 부모도 19일 제주자치도청 '도지사'에 바란다' 코너에 '제주 아이돌봄서비스의 무차별한 홍보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아이와 친근해진 돌보미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은 황포'라며 '아이들은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만큼 우리 아이가 지금 돌보미 선생님과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 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돌보미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나 민원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나이로만 돌보미 업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연령 제한'이라는 이불성설로 국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측은 "가족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돌보미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가족센터와 협의를 거쳐 70세 이상 돌보미의 경우 나이 이외 체력이나 돌보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돌봄 업무를 지속할지 판단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주시 가족센터는 돌보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돌봄사이트를 통해 돌봄을 신청하면 돌보미를 매칭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돌보미들은 부모의 이용료와 정부지원금을 정산해 매월 급여형태로 수당을 포함해 지급받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푸른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6~12세 초등생 30명 모집 돌봄·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지역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이 이도2동에 문을 열었다. 제주시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을 제공하는 '푸른 다함께돌봄센터' (정돈로 1길 36, 2층)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푸른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2㎡ 규모로 조성됐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30명 정원으로 현재 이곳에서는 방과 후 돌봄, 숙제

지도,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방학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다.

이용료는 프로그램비 등으로 월 10만원 이내를 부담할 수 있다. 급·간식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앞서 제주시는 2020년 9월 일도1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1호점을 시작으로 이도2동(2호점), 삼도2동(3호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12월까지 거점형돌봄센터 등 2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진선희기자

독자제보 750-2232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명하게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백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영문'과 '한문'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단심사 심의번호 2019-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수료
산학협력교수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